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류 순 열
세계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눈부신 압축 성장으로 후진국에서 벗어나 어느새 선진국 문턱을 밟고 있으니 말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 많은 이들이 끼니를 걱정 하던 가난한 나라였다. 온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끼니마다 형제들간 반찬 싸움을 벌였으며 몽당연필도 버리지 않고 불펜 껍데기에 끼워 쓰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빠르게 가난의 굴레를 벗고 선진국 문턱을 밟았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헐벗은 채 악다구니를 쓰며 살던 그 시절에 비해 행복한가 말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선진국 문턱을 곧 넘을 거라는 대한민국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말해준다. 한계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것이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들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했던 그 시절엔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집단적 확신이 있었다.

자살률 말고도 불행을 증명하는 상징과 파편들은 널려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층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최고다. OECD 평균 12.6%와 비교가 무색할 만큼 높은 수치다. 저출산

은 또 어떤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을 하고도 아이 하나 낳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보니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태가 된 것이다. 고비용·저효율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그렇게 폐기를 잃어가고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재앙으로 우리앞에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왜 10분의 1도 안되는 2000달러 수준일 때보다도 결혼하기 더 힘들고, 아이는 잘 낳지 않으며 자살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인가.

이 같은 역설은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행복과 희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의 행복이 반드시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국민 행복도 GDP순이 아닌 것이다. GDP는 경제성장의 총량일 뿐 성장의 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이나 복지수준 같은 삶의 질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성장과실의 분배 통로가 막혀 있다면 GDP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수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 것이다.

경제지표가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나라중 행복 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적잖다. 세계은행(WB)이 집계한 201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보면 한국 2만5920달러, 칠레 1만5230달러, 브라질 1만1690달러, 멕시코 9940달러다. 국민소득으로 보면 한국이 월등하게 앞서는 1위다. 그러나 행복지수로 보면 이들 4개국의 국민소득 순위가 정확하게 뒤집어져 한국은 꼴찌로 떨어지고 멕시코가 1위로 올라선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중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수를 보면 한국은 6.0으로 36개국중 25위다. 칠레는 6.6으로 23위, 브라질은 7.2로 13위이며 멕시코는 7.4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민소득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은 크다. 삶의 만족도 지수가 7.8로 1위인 스위스는 1인당국민총소득이 8만6600달러, 2위인 노르웨이는 10만2610달러로 한국의 4배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이 역시 결정적 조건일 수 없다. 인도와 중국 티베트자치구 사이에 있는 인구 75만여명의 소국 부탄은 100명 중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할 만큼 행복지수가 높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00달러 정도로 한국의 ‘가난했던 시절’과 비슷하다. 부탄은 1972년부터 GDP 대신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국가발전의 잣대로 삼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정부명칭도 ‘국민총행복위원회’인데 우리로 치면 장관급인 해당 위원장은 늘 언론 인터뷰에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말한다.

총량지표와 행복지수의 괴리는 무엇보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분배 불균형과 관련이 깊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서 총량지표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1인당 GNI가 2869만5000원이라고 하지만 이중 가계가 온전하게 챙기는 액수는 1608만6000원으로 56%에 불과하다. 국민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감하는 수치는 2869만원이 아니라 1608만원인 것이다. 가계가 챙기는 과실의 비율이 OECD 평

균(62.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선진국의 가계 몫 비중을 보면 미국이 74.2%, 독일 66.1%, 일본 64.2%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1980년 70.7%→1990년 66.7%→2000년 62.9%→2007년 57.6% 식으로 줄곧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가계 빈혈”이라 칭하고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성장 시대에 GDP 증가율은 곧 일자리이고 소득이었다. 그러나 저성장·양극화 시대를 맞아 GDP와 관련 지표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GDP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양만 나타낼 뿐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 나쁜 성장을 해도 GDP는 증가한다. 예컨대 사교육비가 치솟고 흡연과 질병이 늘어도 GDP는 올라간다. ‘평균의 함정’도 있다. 국민 90%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상위층 10%의 소득이 급증하면 평균소득은 올라가듯 성장률이 상승한다.

결론적으로 양극화 세상에서 GDP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국민의 보편적 삶을 말해주지 못한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GDP 증가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국민들을 더 못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게 2010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적 성장조차도 더 이상 어려운 데 말이다. 경제 인식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단지 GDP숫자가 아니라 국민행복과 희망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며 아이도 두려움 없이 낳을 수 있는 세상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